도의회 운영위, 도민참여조례 심사 착수

공모전 응모 '작은 목욕탕 조례안' 등 23건 대상… 참신한 아이디어 · 저예산 등 감안 판단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도민참여조례 심사에 착수했다.

운영위원회는 2016년을 자치입법의 원년으로 삼고 전북 도정 및 교육·학예의 발전과 미래설계를 위한 도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진행됐고 모두 23건이 응모됐다.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조례안(제안)은 조례안을 갖춘 것이 9건, 아이템만 제안한 것이 14건이다.

분야별로는'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복지여성분야가 7건,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대한 조례안'등 건설교통분야가 4건,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문화체육관광분야가 4건 등 23건이다.

1차 심사는 도의회 조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에서 맡고, 2차 심사는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다.

접수된 조례안(제안)은 심사과정에서 전라북도에 맞는 것인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인지, 소액의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적용해 판단하게 된다.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이미 채택 또는 검토되고 있는 제안(조례)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나 시정사항, 민원사항,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하는 것 등이다.

운영위원회는 1차, 2차 심사를 통과해 우수 조례안(제안)으로 선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전라북도 조례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백경태 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은 "도민참여조례 공모전에 참여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새로 구성된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도내 대학생을 비롯한 도민들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이춘석, 남북관계특위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6일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19대 국회 때 야당의 원내수석으로서 여야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온 이 의원의 정치력과 지역적 안배를 두루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다.

20대 국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남북교류협력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남북관계개선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남북관계개선특위를 비롯해 ▲정치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저출산대책특위(위원장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특위(위원장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지방재정및분권특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민생경제특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미래일자리특위(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등 7개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북한 관광 재개 등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우원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실시,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이 포함됨은 물론,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질병관리본부·국가기술표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은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7월7일부터 10월4일까지 90일간이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임명

국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에 임명됐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선 조배숙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북도당은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미래일자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현역의원과 원외 인사를 조화롭게 구성했고, 호남·비호남·수도권 지역 안배에 충실한 인사라고 볼수 있다"며 "전북이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 당원과 전북도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경찰, 5년간 과태료 수입 2조5천억

원금 2조3796억 가산금 수입 1282억

최근 5년 간 경찰이 과태료 가산금을 통해 얻은 수입이 1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매해 과태료 수입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도 경찰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올린 과태료 수입은 총 2조5079억원이다. 이 중 과태료 원금은 2조3796억원, 가산금 수입이 12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경찰청의 경우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다.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하면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원금과 가산금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과태료 수입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세를 띄었다.

2011년에는 3503억6200만원 중 65억9800만원이 가산금으로 전체의 1.85%였다.

이어 2012년에는 3960억9800만원 중 109억3000만원(2.69%), 2013년에는 5035억5700만원 중 301억9900만원(5.66%), 2014년 5452억3200만원 중 374억3700만원(6.43%), 지난해 5844억1200만원 중 431억3000만원(6.87%)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국세징수법상 국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3%인데 비해 세금도 아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게다가 현행 과태료 부과 시스템은 우편 통지가 우선이라 주소 이전 등으로 과태료 부과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가산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태료 징수에만 올인하고 정작 부담이 되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가 안 된 잘못된 제도"라며 "불합리하고 과도한 가산금 비율을 국세 수준인 3%로 조속히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복지포퓰리즘' 이 사회 발전시키기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6일 "경우에 따라 포퓰리즘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창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라고 한다면 '포퓰리즘'이라고 종종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사회라고 하면 마치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 로봇의 생산 투입 등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으로 경제를 지탱할 것인가"라며 "소득을 어떻게든 보장해야 경제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소득 개념도 논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의 복지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며 "정치권이 이 문제를 요령 있게 잘 다뤄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은 야3당 초선 의원들의 연구 모임 포럼으로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다. /뉴시스

더민주 도당, 8개 지역위원장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 중 8개 지역위원장을 확정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 전주갑 김윤덕 ▲ 전주병 김성주 ▲ 군산 김윤태 ▲ 익산갑 이춘석 ▲ 익산을 한병도 ▲ 정읍·고창 하정열 ▲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등 8곳 지역위원장을 의결했다.

또 ▲ 전주을 최형재·이상직 ▲ 김제·부안 김춘진, 최규성 등 2곳은 경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역위원장을 최종 인준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이도영 도의원 상임위 재배정키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배정됐던 이도영 의원(국민의당, 전주2)의 상임위원회가 결국 재배정된다.(본지 7월5일자 3면)

전북도의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 35조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고 또한 조례에 안건심의 등이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배정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다른 상임위 위원의 의견을 묻고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양용호 원내대표는 모임을 갖고 재배정될 이 의원의 상임위를 협의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윤리특위, 소위 구성키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품위 높이기와 관련, 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산회 직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원혜영 더민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제도개선 소위 구성건을 잠정 합의했다. 해당 소위의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윤리위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사무관 11명 등 승진 내정… 행정지원과 · 기획과 5명 차지 소수직렬 배제돼

김제시 공직사회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연공서열 무시 등 불만이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술렁이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사무관 11명 등 승진 내정자에 대한 전보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는 그동안 3~4명에 불과한 사무관급 이상 인사에서 대폭 확대, 대상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 승진 내정자가 알려지면서 소수직렬 직원들은 자포자기하면서 허탈해 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는 100명의 직원 중 사무관이 한명도 없어 오랜 시간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반면에 소위 요직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기획과의 경우 11명의 사무관급 승진대상자 중 5명이 차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6개월 이후 퇴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직원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 격무부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없다는 등 원성을 쏟고 있다.

김제시 한 관계자는 "인사는 51%만 잘해도 만사라고 한다. 하지만 매번 소수직렬 직원들이 승진인사에서 배제되면 무슨 흥이 나서 일을 하겠느냐"면서 "부서 기능도 고려돼야 하지만 서열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김제=곽노태 기자

더민주 "검찰 · 국정원의 후안무치 만천하에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종걸 의원 등이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 대선개입 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지난 4년여의 시간동안 몸과 마음 고생으로 심려가 컸을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야당 "이정현 KBS 보도개입 진상규명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속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미방위 소속 야당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야당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개입 진상 규명을 위해 소관 상임위의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현안 질의를 요구한 것은 정권으로부터 방송을 보호해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회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